

# “정부, 국회에 대한 존중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사태 관련  
“과도한 대응 재발 않도록 적절한 조치 필요” 밝혀  
“국회·정부, 국정운영 파트너... 적대문화 극심”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 강제 퇴장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며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발언 도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실망스럽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청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김 의장은 “여와 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켓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한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은 김 의장을 찾아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 의원 과잉 제압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태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리길”

이성운 전 서울고검장, ‘수사 외압’ 2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윤석열식 정의를 아니라 보편·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판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국 사건을 일으켜 시상을 돌리고 프레임 전환하면서 이성운과 김학의를 뒤섞어 놔서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울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

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자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부디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찰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대검찰청이 착수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이 연구위원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시 그가 맡았던 반부패권력부장관 직책에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어긋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 재판 중 해외 도피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피고인이 해외 도피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도피한 범죄자에 대

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1997년 5억6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출국해 2020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 재판시효가 완성됐으며 대법원이 면소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2007년 재판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해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공소시효 간주 진행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같은당 김정호·신정훈·윤준병·이윤빈·이해식·이형석·최혜영·허영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2024년 업무보고 청취

## “공공심야약국 방법시스템 갖춰 있어야”

환복위, 복지여성보건국·남원의료원·군산의료원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5일 복지여성보건국,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먼저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반찬배달 봉사를 할려고 하는 단체는 많은데 반찬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자치도 차원에서 공유기전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 인상과 관련, 지역별로 경로당 개소수 및 지원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소요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노인 무료급식 지원 단가 인상 관련해 무료급식 식사 지원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방법,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형 저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 관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해 저소득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등 중산층에서 취약계층으로 전향해 복지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과 자식들에게 전부 증여해 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달라지는 복지혜택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긴급복지가정 관련해 최근 4년간 예산집행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출생율을 높이는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방안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지원 관련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운영 대상지 선정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질의하며 심야에 운영하는데 파출소 등과 연계해 방법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확인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재훈 기자

## “특례 발굴로 전북교육만의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교육위,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등 시작 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25일 제406회 임시회에서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박정희 의원(군산2)은 “지금껏 도내 학교나 교육청은 학생 관련 성추행과 학교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하지도 않고 있다”며 따끔하게 질타했다. 그는 “늦장 대응으로 피해입은 학생에게 미안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2·3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해줄 바라며, 학년별 수준에 맞는 성교육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교육청이 강조하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의 성과와 타 시·도 교육청과의 차별화된 ‘특별’이 무엇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의문을 해소시키려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특례 발굴로 전북교육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소통이 전혀 안된다”면서 “교육과 관련한 사소한 사안들까지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교원과 일반직 인사 발표 이전에 인사이동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고 있다”며 “인사에 대한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전북교육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추진 중임에도 진행 상황 보고와 피드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특례 발굴 등 의회와 소통하고 공유해야 하는 만큼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고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도교육청이 지난 1년동안 전국 최우수 교육청이라고 홍보했지만, 최근 발표한 청렴도 평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교육위 의원뿐만 아니라 교육공공체의 사기 저하와 실망감이 매우 크다. 도교육청은 철저타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